



주간 통일정세

2012-27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홍 문화상이 기고한 '백두산 대국의 진군북 높이 울리며'라는 제목의 글을 직함과 함께 실었으며 신임 홍 문화상은 군 소속인 4·25예술영화촬영소에서 영화감독과 소장을 지냈고 국가영화위원장을 역임한 영화제작 전문가임.

● **北 포털사이트 정치코너에 '김정은' 누락(6/28, 연합뉴스)**

- 북한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내나라'의 일부 코너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아직 최고지도자로 표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28일 전함.
- 연합뉴스가 '내나라'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북한의 정치를 소개한 '조선의 정치'에서 '국가영도자'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만 소개돼 있고 김정은은 제1위원장은 포함되지 않음.

● **北 '장군님 사망' 이틀 뒤 공개한 사연(7/1, 노동신문)**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달 30일 '그이와 인민'이라는 장문의 '정론'을 실었는데 여기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사 사실이 사망 이틀 뒤에 공개된 배경에 관한 내용을 전함.
- 정론은 김 위원장의 사망 발표가 늦어진 것은 북한 주민을 배려한 김 제1위원장의 조치였다고 당시 그의 발언까지 소개했는데 "장군님께서 심장의 고통을 멈추신 날이 17일이었지만 우리는 어찌하여 그 대국상을 19일해야 알게 됐던가"라고 자문하고 "내일 18일은 일요일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 인민들이 휴식을 못하고 온통 눈물바다가 될 것입니다"라고 하시며 그이(김정은)께서는 서거와 관련한 중대보도는 다음날 월요일에 내보내야 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함.

● **김정은, 유원지·종양硯 건설현장 현지지도(7/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의 룡라인민유원지 및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건설현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함.
- 통신은 이날 김 제1위원장이 "완공단계에 이른 룡라인민유원지와 건설 중에 있는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를 현지지도했다"며 "군인건설자들에 의해 룡라인민유원지 건설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전함.
- 김 1위원장은 룡라인민유원지 내 곱등어(돌고래)관, 인민군 제267군부대 군인들이 짓고있는 물놀이장 건설현장, 이미 완공된 유희장(놀이공원)을 둘러보았으며 현지지도에는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과 박춘홍·마원춘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김 1위원장을 수행함.



■ 김정은동향

- 6/25, 김정은 제1위원장, 6.25 인민극장에 버스·승용차·사다리차·도로청소용 물차 등 각종 운수기재들 전달(6.25, 중통·중방·평방)
 - 권혁봉 黨중앙위 부부장 등 참가下 전달모임 진행 및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보내는 편지 채택
- 6/27, 김정은 제1위원장, 중요대상 건설 지원 일꾼들에게 '감사' 전달(6.27, 중방)
- 6/28, 김정은 제1위원장, 여러 단위 일꾼들과 근로자들, 어린이들에게 친필 전달(6.28, 중통)
- 6/29, 김정은, 만수대언덕에 김 父子 동상 건립에 기여한 일꾼들에게 감사 전달(6.29, 중방)
- 7/1, 김정은 제1위원장, '능라인민유원지'와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 건설현장 현지지도(7.1, 중통·중·평방)
 - 장성택(국방위 부위원장), 박춘홍·마원춘(黨 부부장들) 동행
 - 능라인민유원지 內 곱등어(돌고래)관과 능라물놀이장 건설장 현지지도 및 능라유희장 현지 요해,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 건설현장 현지지도

■ 기타 (대내 정치)

- 최영림 내각총리, 함경북도 금속부문사업(김책제철·무산광산연합기업소, 청진제강소 등) 현지요해(6.26, 중통)
- 최영림(내각총리), 북부지구 탄광·광산들 생산실태 현지에서 요해(6.28, 중통·평방)

나. 경제

- 中, 투먼~청진항 물류운송 전용열차 운행(6/27, 자유아시아방송(RFA))
 - 중국이 북-중 국경지역에 있는 투먼(圖門)과 북한 청진항 간 화물운송을 위한 전용열차를 운행할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보도함.
 - 중국 지린성 연변(延邊) 주정부는 동북지역의 석탄 등을 청진항을 통해 상하이(上海) 등 남동부 지역과 인근 국가로 운송하는 것이 최적의 물류 방안이라며 투먼에서 북한의 남양, 청진항으로 이어지는 철도를 화물운송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지만 다만 구체적인 열차 개통 시점은 언급하지 않음.
- 北 '첨단기술 산물' 주체철은 실패작(6/27, 좋은벗들)
 - 북한이 첨단기술의 산물로 선전해온 '주체철'이 제품공급 부족으로 내부에서 실패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대북인권단체 (사)좋은벗들이 27



일 전함.

- '주체철'은 용광로에 코크스 대신 무연탄을 철광석, 석회석 등과 같이 넣고 고순도의 산소를 불어넣어 생산한 철로, 북한은 "주체철 생산이 대대적으로 진행된다면 인민경제 발전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공언해옴.
- 좋은벗들이 운영하는 북한연구소의 소식지 '오늘의 북한소식'(461호)에 따르면 북한 중앙당의 한 간부는 "(기대와 달리) 절반도 생산이 안 되고 있다"며 "중앙에서도 좌시할 수가 없어 책임을 물어 솥한 기술자들을 붙잡아갔다"고 전함.
- 또 다른 당간부는 "작년에 실험에 성공은 했지만 작은 노(爐)에서 이뤄진 것이다. 실제 크기의 노에서 해보면 당연히 오류가 발생한다"며 "(철을) 수입에 의존하면서 (평양 10만 가구) 살림집 건설 완공 시기도 무한정 늦어지고 있다"고 말함.

● **北中, 평양에 합영 인쇄공장 설립(6/27,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국문출판사와 중국 동방영리상강국제투자유한공사, 장쑤중채인 무유한공사가 평양시 서성구역에 동백인쇄합영공장을 설립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밝힘.
- 지난 25일부터 조업에 들어간 이 공장은 위조방지인쇄, 비닐인쇄, 철판인쇄 등의 공정을 통해 각종 인쇄물과 상표들을 생산해 판매하게 된다고 통신은 전함.

다. 사회·문화

● **북한,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신청(6/25, 연합뉴스)**

- 북한이 개성 일대 문화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5일 연합뉴스가 전함.
- 25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http://whc.unesco.org>)와 문화재청에 따르면 북한은 '개성역사유적지구'(Historic Monuments and Sites in Kaesong)를 세계유산 중에서도 문화유산으로 등재신청했는데 이런 사실은 세계유산센터가 이날 개막해 다음달 6일까지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하는 제36차 세계유산위원회(WHC)에 세계유산 등재신청 접수결과를 보고하면서 공개됨.

● **최근 강제북송된 탈북자 4명 공개처형(6/25, 연합뉴스)**

- 탈북자 출신인 김홍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25일 "북한에서 들려 온 소식에 의하면 최근 중국에서 붙잡혀 강제북송된 탈북자 44명 중 4명은 처형당하고 나머지는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갔다고 한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김 대표는 이날 인터뷰 전문 인터넷신문인 디인터뷰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관한 '북한인권법 제정 추진을 위한 제3차 세미나에서 "



북한주민의 인권은 북한당국의 그릇된 인권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개선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힘.

● **北서해안 지방에 고온현상 잦아(6/26, 조선중앙통신)**

-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북한 서해안 지방에 고온현상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함.
- 통신은 "낮 최고기온이 지난 5월 하순경부터 대부분 지방에서 평년보다 3~8도, 6월 중순부터는 7도나 높았다"며 이같이 전함.

● **'개봉행사 취소' 北中합작영화 평양서 시사회(6/27,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중국이 합작한 예술영화 '평양에서의 약속(平壤之約·원제 아리랑)'의 시사회가 27일 평양 대동문영화관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시사회에는 북한 측에서 박춘남 문화성 부상 겸 영화총국 총국장과 성기관 일꾼들, 영화부문 창작가, 예술인, 기자들이 참석했고 중국 측에서는 통강 국가광과전영전시총국 영화국장 등 영화대표단 관계자들과 류홍차이 주북대사 등이 참석함.
- '평양에서의 약속'은 중국인 여성 무용수가 북한을 여행하며 북한 무용수들과 우정을 쌓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24일 폐막한 상하이 국제영화제에 출품돼 영화채널매체대상 부문에서 본선에 올랐고 지난 4월 베이징 국제영화제에서도 상영됨.

● **北 "남포서 소금생산유적 첫 발견"(6/28, 조선신보)**

- 북한에서 신석기나 청동기시대, 고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소금생산 유적이 처음으로 발견됐다고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28일 보도함.
- 조선신보는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 연구사들이 남포시 온천군 원읍구에 있는 논밭에서 동서 1km, 남북 2km에 달하는 소금생산 유적을 발견했다고 전했으며 유적에는 소금을 생산하던 시설로 추정되는 직경 20m, 50m, 80m 규모의 원형 뚝 50여 개가 분포하고 있고 깊이 1~1.3m의 뚝에서는 숯층, 진흙층, 숯과 조개가 섞인 층, 감탕층(진흙층) 등이 발견됨.
- 다섯 개의 돌을 원모양으로 쌓아놓은 곳에는 숯·재가 가득 들어찬 시설이 있고 그 위에 가마를 놓은 흔적이 역력했다고 신문은 소개했으며 "이런 돌시설은 소금물을 잡아놓던 염정으로 추정된다"며 선조들의 전통적인 소금생산 방법이 해명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전함.

● **北 올해도 '최악 중 최악' 인권탄압국(6/29, 자유아시아방송(RFA))**

-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올해도 북한을 '최악 중 최악의 인권탄압국'으로 꼽았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보도함.
- 보고서는 북한이 40년 동안 극도로 인권을 탄압한 국가로 선정됐으며



약 20만 명이 정치범수용소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고 설명함.

■ 기타 (대내 사회 · 문화)

- 나선-금강산間 유람선 금강산국제관광(구룡연 · 만물상 · 삼일포 · 해금강), 6.29부터 시작(6.30,중통 · 중방)

2. 대외정세

가. 일반

- **북중 접경 중단등 부동산시장 '꿈틀'(6/25, 연합뉴스; 중국증권보)**
 - 지난해 하반기 이후 중국의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춤했던 북중 접경도시 단둥(丹東)의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25일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에 따르면 완다(萬達)집단이 지난 23일 라오닝성 단둥에서 m²당 6천400위안(약 118만원)에 분양한 '완다광장'의 첫 공급분 주택이 당일 오전에 판매가 마감됨.
 - 신문은 최근 중국 다른 지역에서 상당수 개발업체가 부동산 물량 처리를 위해 가격 인하에 나선 것과 달리 완다집단은 이번에 가격 혜택을 주지 않았는데도 분양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고 전했는데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단둥의 기존 주택 평균 가격도 m²당 5천200위안(약 96만원)에서 5천400위안(약 100만원)으로 소폭 상승함.
- **중외교부, 황금평 개발 좌초설 정면 부인(6/26, 연합뉴스)**
 - 중국이 북한과 함께 개발 중인 황금평 경제구 개발 프로젝트가 좌초됐다는 외신 보도를 정면 부인했다고 연합뉴스가 26일 전함.
 - 중국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황금평 프로젝트의 양대 경제구 항목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는데, 홍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최근 황금평 경제구 사업 보류 의사를 북한에 통보했다는 보도 내용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같이 답했으며 "관련 보도는 터무니없는 날조로 완전히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난함.
- **北 "일본 영토팽창책동 날로 노골화"(6/28, 조선중앙통신사)**
 - 북한은 28일 일본이 태평양에 있는 작은 암초인 '오키노토리(沖ノ鳥)'를 자국의 섬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영토팽창 야망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비난함.
 -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일본이 가는 곳마다 파렴치한 영토팽창 야망을 드러내놓고 생억지를 부리면서 동아



시아지역의 불안정과 긴장 격화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함.

- 대변인은 "오키노토리는 일본 영토로부터 수백 km나 떨어진 태평양 위에 위치한 한갓 바위에 불과한 것으로 유엔해양법협약에 규제된 섬의 범주에 속하지 않아 자체의 경제수역을 가지지 못한다"고 지적함.

● **북·중 첫 종합박람회에 中업계 관심 고조(6/29, 연합뉴스)**

- 오는 10월 북·중 접경도시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시에서 열리는 종합박람회인 '2012 북·중 경제무역문화여행박람회'에 대한 중국 관련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고 29일 연합뉴스가 전함.
- 단둥 현지 매체인 압록강만보는 올해 단둥시 최대 행사인 박람회 개최를 3개월여 앞두고 중국 측 기업에 배정한 400개 전시부스 가운데 200여개가 이미 예약을 마쳤다고 29일 보도함.
- 박람회는 '우의·협작·발전'이라는 구호 아래 양국 상품 전시와 경제무역 상담, 공예품 전시, 문화예술 공연, 관광자원 전시·협작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임.

● **北 불법화물, 中다론허에서 최초 환적·경유(종합)(6/30,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어긴 북한의 불법 화물이 중국 다론허(大連) 항에서 최초로 환적 또는 경유해 국제 운송망을 통해 이동한다는 내용이 안보리의 문서로 공식 채택됐다고 30일 연합뉴스가 전함.
- 안보리 산하 북한 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안보리가 합의한 이 보고서를 29일(현지시간) 제재위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위 보고서에 다론허항이 명시된 것은 처음임.
- 중국측의 양보는 안보리 결의가 계속 무시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북한 감싸기로 일관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다론허항을 거치는 북한 화물은 다수의 중개인에 의해 문서가 세탁되기 때문에 북한측 발송자의 식별이 힘들다고 보고서는 설명함.

● **중국인 대상 금강산 뱃길관광 시작(6/30, 중국국제방송)**

-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금강산 유람선 관광노선이 개통됐다고 중국의 국영 라디오방송인 중국국제방송이 30일 보도함.
- 방송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 100명이 지난 29일 오전 지린성 훈춘(珲春)시 권하통상구를 거쳐 북한으로 들어간 뒤 나진항에서 유람선을 타고 금강산으로 떠났으며 지린성 주민이 대부분인 관광단은 4일간 나선시를 둘러보고 금강산의 사찰, 폭포 등 명소를 관광한 뒤 훈춘으로 돌아감.
- 방송은 "북한이 중국을 대상으로 처음(정식) 유람선 관광노선을 선보였다"며 "유람선을 타고 금강산에 가는 이번 노선은 시작부터 많은 인기를 모았다"고 전했고 또 "이 노선은 상시화될 것으로 보이며 여행사는 한 달에 한 번씩 관광단을 금강산에 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힘.



■ 기타 (대외 일반)

- 한국전 관련 "조선전쟁은 힘의 만능론에 환장한 미제가 조선을 알 잡아보고 도발한 것"이라고 거듭 '북침설'로 왜곡하며 '미제가 힘의 정책을 계속 매여달리는 한 자위적 전쟁억제력을 끊임없이 다져나 갈 것'이라고 주장(6.25, 중통·노동신문·평방/힘의 우세는 미제의 독점물이 아니다)
- 중국 농림수리공회 대표단, 만경대 방문 및 주체사상탑·개선문·우의탑 등 참관(6.27, 중통·평방)
- 北, 미국이 국제사회의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요격시험'(6.26)을 감행했다고 비난(7.1, 중통)

3. 대남정세

● 北, 한일정보보호협정에 "사대매국행위" 비난(6/28,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8일 우리 정부가 이틀 전 국무회의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을 비공개로 의결한 것에 대해 "매국 행위"라며 비난함.
-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논평에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으로 말하면 남조선괴뢰들이 일본과 그 무슨 '도발설'에 대해 쌍피리를 붙어대며 군사 분야에서 포괄적인 정보를 교류한다는 구실로 추진해온 매국협정이며 반공화국 대결공조협정"이라고 주장함.
- 이 매체는 "남조선 괴뢰들에게는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시급히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미국의 압력"이라며 "미국에 잘만 보이면 민족의 운명과 민심 같은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극악한 사대매국의식이 이런 희세의 정치날치기를 빚어낸 것"이라고 비난함.

● 개성공단 상수도관 보수공사에 30억 지원(6/28, 연합뉴스)

- 통일부는 28일 개성공단 용수공급 시설 보수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서면회의를 통해 개성공단 도수터널(상수도관) 보수공사에 30억7천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함.

● 北 "남한에 끌려간 여성 귀환"(종합)(6/28, 조선중앙통신)

- 남한에서 생활하다 북한으로 귀환한 탈북자가 28일 평양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이날 "남조선으로 끌려갔다가 공화국의 품으로 돌아온 박정숙



여성이 2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국내외 기자들과 회견했다"며 해당 여성의 탈북경위와 귀환 소감 등을 전함.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살던 박정숙은 6·25전쟁 때 남한으로 내려간 아버지를 찾으려고 2006년 3월29일 밤 탈북했다가 6년 만인 지난 5월25일 북한으로 돌아갔으며 남한생활에 대해 "탈북자들에게 차례지는 일자리란 오물청소, 그릇닦기, 시중들기 등 가장 비천하고 어려운 일뿐이며 자살률은 여느 사람들의 5배에 달한다"며 "탈북자들은 남조선 사회를 저주하고 자신들을 원망하며 공화국(북한)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함.

● '탈북후 재입북 여성' 박인숙씨로 확인(종합)(6/29, 연합뉴스)

- 탈북 후 남한에서 생활하다 재입북한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은 박인숙씨(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29일 밝힘.
-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북측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내용의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재입북한 인물은 2006년 입국해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던 박인숙씨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함.

● 北 "미국산 무기구매는 무분별한 망동"(6/30, 조선중앙통신)

-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남한의 무기도입사업에 대해 30일 "군사적 대결과 군비경쟁을 격화시키고 정세를 더욱 침체화시키는 무분별한 망동"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비난함.
- 통신에 따르면 조평통은 이날 서기국 보도를 통해 "역적패당은 올해 미국과 백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액수의 무기구매 계약체결을 완료하는 것을 임기 말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다"며 "인민들의 혈세를 미국 상전에게 섬겨 바치고 부정축재해보려는 추악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함.

● '김정은 체제' 이후 국내입국 탈북자 급감(7/1, 연합뉴스)

- 올해 들어 국내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수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1일 전함.
- 1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은 총 610명이며 이는 1천62명을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6% 줄어든 수준임.
- 올해 1월 160명에 이어 2월 90명, 3월 116명, 4월 107명, 5월 137명이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들어왔는데 지난해 월 입국자 수 기준으로 200명을 넘긴 달이 9개월에 달했지만, 올해는 5월까지 한 번도 넘지 못함.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임성남, 러시아 6자 차석대표 면담(6/26)

- 우리 측 6자 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6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러시아 6자 회담 차석대표인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북핵담당 대사를 만나 북한 핵 문제를 논의했음. 두 사람은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광명성 3호) 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6자 회담 등 북핵 문제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했음.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로켓 발사로 2·29 합의가 무산된 뒤 6자 회담 재개와 관련된 논의는 정체된 상태"라면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선 등 6자 회담국의 정치 일정을 볼 때 올해 6자 회담이 재개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음.

● "北-러 외무차관, 6자회담 재개방안 등 논의"(6/28)

- 북한 외무성 궁석웅 부상이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27일(현지시간)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부 아태담당 차관과 회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발표한 언론보도문을 통해 "궁 부상과 모르굴로프 차관이 남북러 3각 협력 프로젝트를 포함한 정치, 경제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의 주요 사안들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음.
- 남북러 3국은 러시아 극동에서 출발, 북한을 경유해 한국으로 이어지는 가스관, 동일 노선의 송전선 건설,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중단철도(TKR) 연결 등의 3각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오고 있음. 외무부는 또 "양측이 동북아 정세 전개와 한반도 핵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 재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 "北 불법화물, 中다론허에서 최초 환적·경유"(종합)(6/30)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어긴 북한의 불법 화물이 중국 다론허(大連) 항에서 최초로 환적 또는 경유해 국제 운송망을 통해 이동한다는 내용이 안보리의 문서로 공식 채택됐음. 안보리 산하 북한 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안보리가 합의한 이 보고서를 29일(현지시간) 제재위 홈페이지에 공개했음.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위 보고서에 다론허항이 명시된 것은 처음임. 이전에는 북한의 불법 수출입에 이용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음에도 중국 측의 반대로 '인접국의 항구' 정도로만 표현됐음.
- 중국 측의 양보는 안보리 결의가 계속 무시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북한 감싸기로 일관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임. 그러나 다론허



을 거치는 북한 화물은 다수의 중개인에 의해 문서가 세탁되기 때문에 북한 측 발송자의 식별이 힘들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패널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 4.15 군사 퍼레이드에서 선보인 새로운 미사일(KN-08)에 주목하고 미사일 탑재차량(TEL)에 대해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의 미사일기술 전문가인 리처드 피셔는 열병식에 등장한 이 차량이 중국의 기술로 개발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음. 보고서는 북한에서 "이전에 그런 수준의 차량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인 바 없었다"며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보고서는 'KN-08'은 물론 '무수단' 미사일의 운영 수준에 대해 전문가들이 다양한 수준의 의심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4월 공개한 'KN-08'이 모형이었을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이 논의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북한 우리농축프로그램(UEP)의 총규모와 고농축우라늄(HFEU) 보유 여부 등은 명확하지 않지만 영변 이외의 지역에 관련 시설을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음. 따라서 가스 원심분리기 제작에 필요한 마레이징강(maraging steel) 등 특수물질의 수입과 생산 여부 등을 주시키로 했음.
- 보고서는 북한이 이란과 시리아, 미얀마 등과 계속 군사협력을 진행 중이며, 특히 2008 체결된 북한-미얀마 간의 군사협력 양해각서가 구체화될 경우 안보리 결의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4.13 장거리 로켓발사와 4.15 군사 퍼레이드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불법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북한이 안보리 결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음을 거듭 확인했음. 그러면서 북한의 불법무기 화물을 검색하거나 이를 사전에 중단시켰을 경우 해당 내용과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늦어도 3개월 내에 제재위에 신고 또는 보고할 것을 권고했음. 유엔 및 관련기구의 활동이 안보리 결의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는 지침도 마련하는 한편 유엔 내부 전문가 그룹간의 조정자 회의를 창설, 업무협력도 더욱 강화키로 했음.
- 안보리 결의 1874호(2009년)에 따라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P5+2) 등 7개국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은 그동안 대북제재 이행상황과 제재 관련 정보수집, 검토, 분석, 이행개선 권고 활동을 벌여 왔음. 2010년 연례보고서는 공개됐지만 북한의 기관, 단체 19곳과 개인 17명의 추가 제재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2011년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은 물론 공개되지도 못했음. 패널은 지난 12일 활동 시한을 1년 더 연장했으며 앞으로 4.15 열병식에서 공개된 미사일 탑재 차량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확산에 연루된 50여개 단체에 대한 추가 조사에 집중할 계획임. 제재위 관계자는 "안보리 공식문서에 다렌향을 명시하고 새로 공개된 미사일 탑재차량을 조사키로 함으로써 중국을 어느 정도 압박할 수 있게 됐다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 미·북 관계

● 北 "미국산 무기구매는 무분별한 망동"(6/30)

-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남한의 무기도입사업에 대해 30일 "군사적 대결과 군비경쟁을 격화시키고 정세를 더욱 침체화시키는 무분별한 망동"이라고 비난했음.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평통은 이날 서기국 보도를 통해 "역적패당은 올해 미국과 백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액수의 무기구매 계약체결을 완료하는 것을 임기 말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다"며 "인민들의 혈세를 미국 상전에게 섬겨 바치고 부정축재해보려는 추악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음.

다. 중·북 관계

● 북중 접경 中단동 부동산시장 '꿈틀'(6/25)

- 지난해 하반기 이후 중국의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춤했던 북중 접경도시 단동(丹東)의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대고 있음. 25일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에 따르면 완다(萬達)집단이 지난 23일 랴오닝성 단동에서 m²당 6천400위안(약 118만원)에 분양한 '완다광장'의 첫 공급분 주택이 당일 오전에 판매가 마감됐음. 완다광장은 완다집단이 26만2천m²의 부지를 사들여 아파트, 고급 단독주택, 쇼핑몰, 호텔, 업무용 빌딩 등을 조성하는 사업임.
- 신문은 최근 중국 다른 지역에서 상당수 개발업체가 부동산 물량 처리를 위해 가격 인하에 나선 것과 달리 완다집단은 이번에 가격 혜택을 주지 않았는데도 분양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고 전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단동의 기존 주택 평균 가격도 m²당 5천200위안(약 96만원)에서 5천400위안(약 100만원)으로 소폭 상승했음. 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의 개방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한때 조정을 겪은 단동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되살아나는 게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음.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신의주와 마주한 단동은 북중 경협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난해 상반기 중국 70개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집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 단동시는 북한의 개방에 대비, 경제특구 성격을 갖는 신청(新城)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동 개발에는 완다집단 이외에 바오리(保利)집단, 위청(緯城)부동산, 싱가포르의 형제집단 등 유수의 중화권 기업이 참여하고 있음. 현지에서는 장기적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북한이 개방에 나서면 서울-평양-신의주-단동으로 이어지는 경협 벨트가 활성화해 단동이 한반도의 교역 거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음.

● 中외교부, 황금평 개발 좌초설 정면 부인(6/26)

- 중국이 북한과 함께 개발 중인 황금평 경제구 개발 프로젝트가 좌초됐다는 외신 보도를 정면 부인했음. 중국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26일 "황금평 프로젝트의 양대 경제구 항목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



혔음. 홍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최근 황금평 경제구 사업 보류 의사를 북한에 통보했다는 보도 내용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같이 답했음. 홍 대변인은 "관련 보도는 터무니없는 날조로 완전히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난했음. 교도통신 등 일부 일본 매체는 25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직후 중국이 경제적 가치가 적다는 이유를 들어 황금평 공동개발 사업을 보류하고 싶다는 뜻을 북한에 전했다고 보도했음.

- 황금평은 라오닝성 단둥(丹東)과 접경한 압록강 하구의 북한 섬임. 중국과 북한은 작년 6월 천더밍(陳德鎰) 상무부장과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 양국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황금평경제구 개발 착공식을 거행했음. 그러나 착공식 이후 본격적 공사가 진행되는 모습이 목격되지 않아 북중 간 협력에 이상 기류가 흐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끊이지 않았음.

● "中, 투먼~청진항 물류운송 전용열차 운행"(6/27)

- 중국이 북-중 국경지역에 있는 투먼(圖門)과 북한 청진항 간 화물운송을 위한 전용열차를 운행할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보도했음. 중국은 이미 북한의 나진항을 통해 석탄 등 각종 화물을 남동부지역으로 운송하고 있어 청진항에 물류운송 전용열차가 운행되면 북-중간 경제협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 중국 지린성 연변(延邊) 주정부는 동북지역의 석탄 등을 청진항을 통해 상하이(上海) 등 남동부 지역과 인근 국가로 운송하는 것이 최적의 물류방안이라며 투먼에서 북한의 남양, 청진항으로 이어지는 철도를 화물운송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음. 다만 구체적인 열차 개통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음.
- 연변 주정부는 또 이미 북중 양측이 합영공사를 설립해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해부터 중국측 주도로 화물수송 등을 위한 전용열차도 제작되고 있다고 전했음. RFA는 "중국 당국이 공개적으로 청진항 사용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처음으로, 나진항에 이어 조만간 청진항도 중국에 공식 개방될 가능성이 커 주목된다"고 의미를 부여했음. 중국은 2010년 나진항 4~6호 부두를 50년간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북한과 체결하고 청진항 3~4호 부두를 15년간 이용할 수 있는 사용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北中, 평양에 합영 인쇄공장 설립(6/27)

- 북한 외국문출판사와 중국 동방영리상강국제투자유한공사, 장쑤중채인무유한공사가 평양시 서성구역에 동백인쇄합영공장을 설립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밝혔음. 지난 25일부터 조업에 들어간 이 공장은 위조방지인쇄, 비닐인쇄, 철판인쇄 등의 공정을 통해 각종 인쇄물과 상표들을 생산해 판매하게 된다고 통신은 전했음. 공장은 생산설비가 들어선 1층과 제품검사를 담당하는 작업장, 사무실이 갖춰진 2층으로 구성됐음.



● '개봉행사 취소' 北中합작영화 평양서 시사회(6/27)

- 북한과 중국이 합작한 예술영화 '평양에서의 약속(平壤之約·원제 아리랑)'의 시사회가 27일 평양 대동문영화관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시사회에는 북한 측에서 박춘남 문화성 부상 겸 영화총국 총국장 과 성기관 일꾼들, 영화부문 창작가, 예술인, 기자들이 참석했고 중국 측에서는 통강 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 영화국장 등 영화대표단 관계자들과 류홍차이 주북대사 등이 참석했음. '평양에서의 약속'은 중국인 여성 무용수가 북한을 여행하며 북한 무용수들과 우정을 쌓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 영화는 지난 24일 폐막한 상하이 국제영화제에 출품돼 영화채널매체 대상 부문에서 본선에 올랐고 지난 4월 베이징 국제영화제에서도 상영됐음. 이에 앞서 북한과 중국은 지난달 22일 평양에서 중국 측 대표단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영화의 개봉 행사를 할 계획이었지만 북한 측이 갑자기 행사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동해 北 해역서 불법 조업 中 어선에 철퇴(6/28)

- 서해에 이어 동해에서 불법 조업을 해오던 중국 어선들이 북한과 중국 정부의 철퇴를 맞게 됐다. 양국은 당국 간 협의를 거쳐 동해의 북한 쪽 수역에서 '허가받은' 어선만 조업하도록 했음. 중국 농업부가 이런 내용을 골자로 '북한 동부해역 원양어업 프로그램관리 규정'을 각 해당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28일 보도했음.
- 이 규정에 따르면 북중 양국 간에 지난 2010년 4월 체결한 '북한동부해역 조업 협력 합의'에 따라 각각 중국의 원양어업협회, 북한의 공동조업협회로부터 사전에 허가받은 어선만 해당 해역에서 조업할 수 있음. 북중 양국은 협회 차원에서 미리 조업 규모와 조건을 정하고 그에 걸맞게 어선 수와 시기를 정해 동해의 북한 수역에서 조업을 허가할 예정임. 양측은 아울러 조업 과정에서 돌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제때에 적절하게 타협, 처리해 중대한 외교 문제 또는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기로 했음.
- 중국 농업부는 동해의 북한 수역이 민감하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이 얽힌) 복잡한 곳이고 북중 관계와 지역 안정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살폈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사실 어족 자원 고갈로 산둥(山東)·랴오닝(遼寧)성, 텐진(天津)시의 어민들이 서해의 북한 해역은 물론 멀리 동해까지 진출해 씩씩이 어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중국 어선들은 서해의 남북한 수역을 수시로 침범해 불법 조업하다가 단속에 걸리면 내뺀는 탓에 크고 잦은 사건이 잦음. 중국 어선들은 한국의 해양 경찰에는 흥기로 대항하고 서해의 북한 수역에서는 담당 해군부대에 뇌물을 주고 불법 조업을 해왔음.
- 이런 과정에서 지난달 8일 서해상에서 랴오닝성의 어선 3척이 북한 해군에 나포됐다가 2주일가량 구금된 후 북중 양국 협상을 통해 풀려나기도 했음. 해당 사건은 북한 측이 통상적인 금액 이상의 거액을 요구하면서 북중 외교 갈등으로 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이번



중국 어선의 동해 불법 조업 단속 합의도 서해에서의 중국어선 나포 사건을 계기로 열린 북중 외교 교섭에서 합의된 것으로 보고 있음. 북중 양국은 그러나 서해에서 북한 수역을 침범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와 관련해선 아직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음.

● 북·중 금강산 유람선 관광 개시..코스 확대 봇물(6/30)

- 북·중 접경인 중국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시에서 북한 함경북도 나선항을 통해 유람선을 타고 금강산을 관광하는 코스가 정식 개통됐음. 30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 100여명이 29일 훈춘시 취안허(圈河)통상구를 거쳐 4일간의 첫 금강산 유람선 관광길에 올랐음. 관광객들은 이날 오전 취안허통상구에서 차를 타고 국경을 넘어 나선시에 도착했으며 시내를 관광한 뒤 나선항에서 유람선을 타고 금강산으로 향했음. 이들은 금강산에서 해금강, 만물상, 구룡연 등의 절경을 둘러보고 다시 유람선으로 나선항에 돌아올 예정이다. 북·중은 당초 지난 4월 금강산 관광구를 중국인 관광객에게 정식 개방할 계획이었지만 장거리 로켓인 광명성 3호 발사 시점과 맞물려 관광객 안전 등을 고려해 시점을 미뤘음. 훈춘~금강산 유람선 관광의 독점운영권을 가진 지린성 연변천우국제여행사 관계자는 "이 코스는 중국에서 바다를 건너 금강산을 해상 관광하는 첫 노선이라는데 의미가 있으며 관광객의 반응도 아주 좋다"면서 "앞으로 매월 한차례 여행단을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음.
- 최근 중국에서는 북한 곳곳의 명승지를 여행하는 관광코스가 많이 늘어나는 등 유례없는 북한 관광 붐이 일고 있음. 북·중은 예전에도 3~5개의 관광코스를 꾸준히 유지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코스가 10여개로 증가했음. 북한 관광형태도 이전에는 전세기를 이용해 평양이나 금강산 인근 원산공항에 내려 버스로 이동하는 형태가 주를 이뤘으나 현재는 비행기 이외에 훈춘, 투먼(圖門) 등 북·중 접경지역에서 출발하는 기차, 자가용, 도보관광 등이 추가로 생겼음.
-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랴오닝성은 지난 1988년부터 북한 관광을 시작해 단둥(丹東)에서 기차를 타고 압록강을 건너 북한 신의주~평양으로 향하는 코스를 운영하고 있음.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접경한 지린성에서는 1991년 북한 관광코스가 처음 개통됐음. 한 전문가들은 올해 들어 북·중 관광이 활성화는 것에 대해 북한의 경제난 해소를 지원하려는 중국과 단기간에 외화를 벌어들여려는 북한의 이해가 맞물린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음.

라. 일·북 관계

● 日법원 "조선총련 본부 압류 가능" 확정 판결(6/28)

- 조선총련(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계 신용조합의 파산으로 일본 정부에 9천억 원대 빚을 진 조선총련이 도쿄에 있는 중앙본부 토지와 건물을 압류



당하게 됐다. 28일 조선총련과 재일민단 등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이날 일본 채권정리기관인 정리회수기구(RCC)가 "조선총련의 중앙본부 건물을 압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소송에서 조선총련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정리회수기구는 이를 근거로 도쿄 시내 지요다(千代田)구에 있는 조선총련의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를 압류해 경매에 넘길 수 있을.

- 앞서 정리회수기구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조은신용조합이 잇달아 파산하자 부실채권 1천553억 엔 중 627억 엔(약 9천100억 원)을 조총련이 빌려갔다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정리회수기구는 이후 조총련의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를 압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이는 2010년 6월29일 패소가 확정됐다. 이유는 조총련 중앙본부 토지와 건물이 별도 회사인 조선중앙회관관리회(합자회사) 명의로 돼 있기 때문이었음. 정리회수기구는 다시 "명의로 달라도 중앙본부 토지와 건물은 실질적으로 조총련의 자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달라"며 별도의 소송을 냈고, 1심(2009년)과 2심(2010년 12월)에서 각각 승소했음.
- 조선총련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조선중앙회관(조선총련 중앙본부 건물)은 조선총련 중앙본부의 것이 아니라 조선중앙회관 관리회 소유"라며 "정리회수기구가 지난해 11월의 화해 합의를 6개월 만에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은 유감이지만, 우리는 이 문제가 어디까지나 대화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은신용조합은 조선적(朝鮮籍·일본 법률상 무국적) 재일동포를 위한 금융기관으로 설립돼 한때 일본 전역에 38곳으로 불어났지만, 1997년부터 16곳이 잇따라 파산했음. 정리회수기구는 이미 아이치(愛知), 미야기(宮城), 지바(千葉) 등지에 있는 조선학교 13곳의 건물과 토지를 기압류해 일부는 경매에 넘겼음.

● 北 "일본 영토팽창책동 날로 노골화"(6/28)

- 북한은 28일 일본이 태평양에 있는 작은 암초인 '오키노토리(沖ノ島)'를 자국의 섬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영토팽창 야망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비난했음.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일본이 가는 곳마다 파렴치한 영토팽창 야망을 드러내놓고 생억지를 부리면서 동아시아지역의 불안정과 긴장 격화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변인은 "오키노토리는 일본 영토로부터 수백 km나 떨어진 태평양 위에 위치한 한갓 바위에 불과한 것으로 유엔해양법협약에 규제된 섬의 범주에 속하지 않아 자체의 경제수역을 가지지 못한다"고 지적했음. 또 "독도를 제 땅이라고 우겨대고 주변나라들의 합법적인 영토를 넘겨다보는 영토팽창 야망은 인류 공동의 재부인 국제해저까지 강탈해보려고 날뛰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군국주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오키노토리는 도쿄에서 남쪽으로 1천700km 떨어진 남태평양 환초(산호초)에 솟은 바위로 일본은 1988년부터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고 자국 섬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과 중국 등 인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



음. 또 유엔 대륙붕 한계위원회(CLCS)도 오키노토리가 섬인지, 바위인지에 대한 논란이 해결될 때까지 오키노토리 남쪽 해역을 일본 대륙붕이라고 권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고위실무협의를 동맹 현안 조율(6/30)

- 김규현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커트 캠벨 미국무부 차관보와 대니얼 러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 등을 잇따라 만나 한미 동맹 현안과 대북 정책 등에 대해 조율했음. 현지 외교소식통은 "이달 초 부임한 김규현 차관보가 미 정부 협의 상대들과 상견례를 겸해 만나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음. 양국은 특히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 내부동향과 향후 대북 정책의 기조를 점검하고, 동아시아는 물론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중국과 관련된 현안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이날 양측 협의 과정에서 최근 한국내에서 논란이 된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서명 연기 문제에 대해 미국 측이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음. 이 소식통은 "미국 측에서 여러 사안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일정보협정의 서명이 늦어진 일을 궁금해했고, 이에 대해 우리 측이 국회 절차나 국내 여론 등을 설명했다"고 말했음. 미국 측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대략 '이해했다'는 분위기였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 이와 관련, 미 국무부 당국자는 "이번 일은 한국과 일본 정부가 결정한 것"이라면서 "추가적인 정보 등은 양국 정부에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일정보협정이 유용할 것이라면서도 "이 일은 한국과 일본 간 양자 이슈"라고 선을 그은 뒤 "우리가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외교소식통은 "한일정보협정 체결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미묘한 정서가 개입되는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새삼 실감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한·중 관계

● 中칭다오 韓기업 공장붕쇄사건 소송전 비화(6/25)

- 중국 칭다오(靑島) 소재 한국 스포츠용품업체인 신신체육용품유한공사와 현지 주민 간의 공장 붕쇄 다툼이 맞소송 전으로 비화했음. 25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신신체육용품이 칭다오시 중급 인민법원에 해당 지역 촌 정부인 중한서취(中韓輸出區) 주민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데 맞서 이번에는 중한서취 측이 칭다오시 라오산구 법원에 역소송을 냈음. 신신체육용품은 중한서취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 주민



- 이 공장 정문을 막고 차량 진출입을 통제하며 전기, 수도 공급까지 끊는 바람에 생산이 중단돼 그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소송을 냈음. 중한서취 측은 밀린 임대료 990만 위안을 내라는 게 소송의 골자임.
- 양측 갈등은 1991년으로 거슬러 감. 당시 외국 기업 투자유치에 열을 올리던 촌 정부는 신신체육용품과 50년 임대차 계약을 맺었음. 그러나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땅값이 상승하고 중앙정부가 1999년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최장 임대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자 중한서취 측이 신신체육용품에 재계약을 요구해왔음. 해당 부지가 마을이 공동으로 소유한 '집체토지'로 임대료를 촌민들이 나눠 가지기 때문에 촌민 모두가 임대료 인상을 바라던 터였음. 촌 정부는 그러면서 수년 전 일방적으로 임대료 500% 인상과 2년 단위 임대계약 등을 제시했음. 신신체육용품이 당연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음. 그러자 촌 정부는 인상된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수차례 통보했다고 밝혔음. 그런 반면 신신체육용품은 50년 기한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고 있음. 이런 공방이 오가면서 해당 지역 주민은 실력행사에 나서 지난 15일부터 공장을 전면 봉쇄하고 있음. 현재 칭다오의 신신체육용품 공장은 '완전정지' 됐음.
 - 주중 한국대사관과 칭다오 총영사관이 나서 공안부와 상무부 등의 중앙 정부 기관은 물론 현지 칭다오시와 라오산구 정부를 상대로 우선 공장 봉쇄 조치를 풀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사실상 진전이 없는 상태임. 특히 올 초 광둥(廣東)성 우칸(烏坎) 촌 서기가 집체토지를 개발업자에게 헐값에 팔았다가 우칸촌민의 반발로 처벌된 것을 계기로 중국 내에서 권리의식이 높아졌고 중국 당국이 제18차 당 대회를 앞두고 민심이반을 우려하는 탓에 신신체육용품 공장 봉쇄 사태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옴. 중국 상무부와 공안부, 칭다오시 정부 측은 신신체육용품과 중한서취 측이 서로 민사소송을 낸 것을 계기로 민간의 다툼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개입을 꺼리는 쪽으로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임. 그러나 이번 신신체육용품 공장봉쇄 사건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국에서 50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표적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됨.

● 불법조업 다루는 한중 어업협의회 출범(종합)(6/26)

-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조업 문제를 다루는 한중 어업협의회가 26일 출범했음.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양국의 협의에 따라 '한중 어업협력협의회'가 오늘 베이징에서 개최됐다"며 "양측에서 외교 및 어업, 해상 치안담당부처 관계관들이 참석해 어업질서 확립 관련 건설적인 협력증진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음. 외교 및 어업당국이 참여하는 한중 어업협의회가 출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지난해 12월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우리 해경을 중국 선원이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협의채널 구축 논의가 본격화 됐음.
- 이날 첫 회의에 우리측에선 수석대표인 외교부 박준영 동북아국 심의관



과 농림수산물식품부 및 해양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고, 중국 측에선 수석대표인 귀샤오춘 외교부 영사사 부사장과 농업부 및 공안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음. 조 대변인은 "우리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가 제기된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계기가 있을 때마다 양국 간 협의체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고, 중국 측에서도 협의체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해왔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어업분야 관계부처 공무원 간 교류를 확대하고 유사시 양국의 관계기관 간 소통체제를 강화하기로 했음. 외교부 관계자는 "불법조업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일종의 핫라인을 구축한 셈으로, 이번 회의와 같은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다만, 우리 측은 국장급 이상의 고위급 협의체를 희망했지만, 양국 간 협의과정에서 심의관(부국장)급으로 낮아졌음. 또 협의체 회의를 정례화하는 방안 대해서도 중국 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중 FTA 2차 협상 제주서 개최(6/27)

- 한국과 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2차 협상을 다음달 3일 제주에서 시작한다고 외교통상부가 27일 밝혔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를 수석대표로 하는 한국 측 협상단에는 기획재정부, 농림수산물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주요 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함. 중국측 수석대표는 위지안화(俞建華) 상무부 부장조리(部長助理: 차관보급)임. 두 나라는 지난 5월2일 베이징에서 1차 협상을 벌였음. 5일까지 열리는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한·중 FTA의 범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무역협상 위원회(TNC) 산하 협상 작업반을 설치할 예정임. 상품·서비스·투자 등 분야별 협상지침도 논의함.

다. 한·일 관계

● 日 중학 부교재 "간토대지진 균경이 조선인 학살"(6/25)

- 일본 요코하마시의 중학교 부교재가 간토(關東)대지진 당시 일본 군인과 경찰이 조선인을 학살했다고 기술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5일 보도했음. 신문에 의하면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가 시립중학교 학생 전원에게 배포한 올해 판 부교재인 '와카루 요코하마(알기 쉬운 요코하마)'는 "(도쿄에서) 군대와 경찰, 재향군인회와 청년회를 모체로 조직된 자경단 등이 조선인에 대한 박해와 학살을 자행했으며, 중국인도 살상했다"고 기술했음. 또 "요코하마에서도 각지에서 자경단이 조직돼 이상(異常) 긴장상태하에서 조선인과 중국인이 학살된 사건이 일어났다"고 적었음.
- 우익지인 산케이신문은 이 기술을 '자의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거치지 않은 부교재 문제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부교재의 기술은 일본 정부나 당국이 지금까지 부인한 것이지만 그동안 양



심적인 일본 학자나 한국, 중국의 연구결과 진실로 드러난 것임. 작년도 판에는 "정부가 계엄령을 발동해 군대를 요코하마에 출동시켰음. 이유는 자경단 가운데 조선인을 살해하는 행위로 나아간 사람이 있었기 때문임. 요코하마시내만 해도 다수의 희생자가 나왔다"고 기술했었음. 이는 군대의 출동이 마치 조선인 살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포장한 것으로, 올해 판에서 전면 수정됐음. '와카루 요코하마'는 중학생이 요코하마시의 역사와 문화, 자연 등의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수업에서 활용하는 부교재로 해마다 데이터가 갱신되며, 1학년생 전원에게 배포됨. 올해도 이달 초 약 2만7천명분이 149개교에 배포됐음.

- 간토대지진은 1923년 9월 도쿄를 비롯한 간토지방에서 발생해 10여만 명 이상이 사망한 최악의 대지진임. 당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조작되고 일본 사회의 내부 불만이 조선인에게 향하면서 재일동포가 일본의 군경, 주민에 의해 대량 학살됐음. 일본 당국은 당시 학살된 조선인이 230명 정도라고 주장하지만 한국의 연구자들은 6천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日 니콘, 일본군 위안부 사진전 열기로(6/25)

- 일본 카메라 제조업체인 니콘이 법원 결정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를 소재로 한 사진전을 열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음. 니콘은 26일부터 내달 9일까지 신주쿠 니콘살롱에서 한국인 사진작가 안세홍(41. 나고야 거주)씨의 '겹겹-중국에 남은 조선인 위안부 할머니들 사진전'을 열기로 했음. 이는 도쿄 지방재판소(지방법원)가 22일 안 씨가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임.
- 니콘측은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현 시점에서는)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사진전 개최를 결정했음. 니콘은 일단 안 씨와 살롱 사용 계약을 맺었다가 이 사실이 일본 언론에 보도된 뒤 항의가 제기되자 지난 달 말 사용 취소를 통보했음. 월간 '사회평론' 사진기자 출신인 안 씨는 일본을 중심으로 세계 주요 도시에서 일본군 위안부 사진전을 벌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 日, 새누리당 지도부 독도 방문에 항의(6/28)

- 일본이 새누리당 지도부의 독도 방문에 대해 항의했음. 2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황우여 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날 독도를 방문한 것과 관련,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한국 정부에 "매우 유감이다"고 항의했음. 외무성은 항의 사실을 야당인 자민당에도 통보했음. 황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날 정례 최고위원회의를 갖는 대신 독도를 단체로 찾았음.

● 日법원, 韓아내 죽인 남편에 구형량보다 중형 선고(6/29)

- 한국인 아내를 죽인 뒤 시신을 토막 내 버린 일본인 전직 경찰관에 대해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됐음. 요코하마 지방재판소 형사합의3



부는 29일 상해치사와 절도, 사채손괴·유기죄로 징역 12년이 구형된 야마구치 히데오(山口英男·51) 피고인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음.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죄질로 미뤄볼 때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음. 일본 법률상 상해치사죄의 법정 형량은 징역 3년 이상 20년 이하이고, 절도죄는 징역 10년 이하임. 최고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징역 10년 전후의 형 선고가 예상됐음.

- 야마구치 피고인은 2010년 9월1일 요코하마 시내 자택에서 '빌린 돈 50만 엔을 갚아야 한다'는 독촉을 듣고 아내 조모(당시 41세)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흥기로 시신을 20차례 토막내 쓰레기 버리는 곳과 강 등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음. 야마구치 피고인은 아내를 통해 아내의 친구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이 사용했고, 범행 후에도 아내의 현금카드를 훔쳐서 돈을 꺼낸 뒤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음. 피고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한차례 밀었음 뿐인데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숨진 만큼 불행한 사고에 가깝다"며 "아내의 현금카드를 상속인인 남편이 사용한 만큼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日 "협정 서명 연기 믿을 수 없다" 당혹>(종합)(6/29)

-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의 서명을 연기하겠다고 통보하자 일본 측이 "믿을 수 없다"며 당혹스러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29일 서명 연기를 통보받은 일본 정부 관계자가 "믿을 수 없다"거나 "도타켄(막바지라는 의미의 일본어 '도탄바'와 '취소'라는 뜻의 영어 '캔슬'을 합친 일본식 조어)은 바로 이걸 두고 하는 말이다"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일본 측 분위기를 전했다. 일본 측에 서명 연기 의사를 전한 것은 주일 한국대사관의 이경수 정무공사였음. 이 공사가 이날 오후 3시께 국내 분위기를 설명하며 서명 연기를 요청하자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여야가 국회 개월에 전격 합의했다는 등의 한국 측 사정에 대해 이해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은 스기야마 국장이 "오늘 서명을 해야 함. (서명) 연기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사실상 항의했다고 전했다. 이 공사는 "스기야마 국장도 충분히 이해를 했다"고 설명했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오늘 중으로 서명되길 기대했는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일본 측은 연기 경위보다 앞으로 협정 체결 가능성을 걱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요코이 유타카(横井裕) 외무성 외무보도관은 이날 자국 취재진에 "가능한 조기에 서명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케다 히로후미(武田博史) 방위성 보도관도 "안전보장 면에서 일한(한일)간 협력 관계를 심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가능한 한 조기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한국 측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8월15일 광복절이나 12월 한국 대선이 임박하면 한국 내 반일 여론이 고조돼 협정 체결이 어려워



질 수도 있는 만큼 "여름이 오기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현실적으로 한국의 정치 정세나 여론 동향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언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지 전망이 서질 않는다"고 비관론도 나오기 시작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 "한일정보협정 추진, 北급변사태·PSI도 고려"(7/1)

-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한 배경에는 북한 급변사태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의중도 크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뇌졸중 이후 북한 내부 정변 가능성 등 미확인 첩보가 많았고, 지금도 북한 권력변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이런 것들이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됐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24개국과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국방부가 일본과는 양국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때를 기다린 것은 맞다"면서 "그 과정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뿐 아니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김정은 후계체제 등 북한 내부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내부 동향을 한미의 대북정보로만 커버할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하겠느냐"면서 "북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메커니즘을 더욱 보강할 필요성이 지난 1월부터 정부 내부에서 급속히 제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차단을 위한 정보 교류의 실효성을 높이는 필요성도 배경으로 꼽혔음. 소식통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의심 선박은 한·일 수역으로 항해할 수밖에 없다"면서 "상호 정보를 교환해서 완벽하게 차단을 해야 하는데 정보보호협정이 없으면 사실상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PSI에 참가한 국가들은 의심선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는 있다"면서도 "다만, 제도적(협정)으로 교류 여건을 보장하면 훨씬 (정보교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가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마지막(협정 체결)은 외교부가 하는 것이 맞다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이라고 전했다.
- 소식통은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과 관련해서는 "상당기간 논의가 중단될 것으로 본다"면서 "초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중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국 뿐 아니라 정부 내부 협의도 중지됐다"면서 "상호군수지원협정은 비전투분야, 국외에서 PKO(유엔평화유지) 활동에 한정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었다"고 덧붙였다.



라. 미·중 관계

● "中, 美항모 개입차단 무인항공기 개발 완료"(6/25)

- 중국이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등에서 유사시 미국 항공모함의 개입을 억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무인항공기(UAV) 개발을 이미 완료했다고 대만 중앙통신사(CNA)가 미국 군사 전문기관 등의 보고서를 인용해 25일 보도했음. 보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소재 국방정책 싱크탱크인 제임스타운 재단 산하 '차이나 브리핑' 뉴스 웹사이트는 중국의 지속적인 무인항공기 분야 투자는 이 분야에서 중국을 미국에 이어 2번째 경쟁력을 가진 국가로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음. 이 웹사이트는 이어 중국이 개발, 시험 운항 중인 무인항공기는 분쟁 지역에 대한 제3국의 개입을 막는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며 특히 미국 항공모함의 개입을 차단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음.
- 중국군은 그간 주요 분쟁지역에서 미 항공모함의 개입을 최대 '걸림돌'로 인식해 왔음. 영국의 군사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지는 또 일본 방위성이 최근 공개한 중국 무인항공기 사진을 분석, 이 무인기가 우수한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고 34kg의 장비 등을 적재할 수 있으며 6시간까지 공중에 머물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것으로 분석했음. 이 잡지는 이 무인기가 정찰 업무 수행 시 필요에 따라 다양한 센서를 탑재할 수 있다고 소개했음.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사진은 4월 말 중국군이 태평양의 작은 산호섬인 오키노토리 섬 동쪽 700km 해상에서 이·착륙 연습을 하는 장면인 것으로 전해졌음.
- 앞서 차오지다번잉(超級大本營) 등 중국의 군사 동호인 사이트 등에는 지난해 7월 중국 무인정찰기가 활주로에서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 여러 장이 공개된 바 있음. 이 무인정찰기는 '비상하는 용'이라는 뜻의 '샹룽(翔龍)'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음. 미국의 무인 전략정찰기인 글로벌 호크와 유사하다고 해서 중국판 글로벌 호크로도 불림.

● 中, 美에 "中 부근서 정찰활동 말라" 요구(6/27)

- 중국이 미국 측에 중국 연안 부근에서 정찰비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음. 중국의 량광례(梁光烈) 국방부장과 마샤오톈(馬曉天)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은 26일 베이징(北京)에서 새뮤얼 록클리어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을 만나 그같이 요구했다고 관영 영자지인 차이나데일리가 27일 보도했음. 량 부장은 우선 "중국과 미국의 군사 관계도 여타 양자관계와 마찬가지로 발전 잠재력이 크다"며 "평등과 호혜의 군 관계를 설립하는 것이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기대에도 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군사교류 증진과 비전통적인 안보분야에서의 협력을 심화하고 싶다"고도 했음. 량 부장은 그러나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로 복귀한 미국이 중국 연안과 가까운 곳에서 빈번하게 정찰 비행을 하는 건 우려스러운 일이라면서 중단을 요구했음.
- 이에 록클리어 사령관은 미국이 태평양 국가로서 아태 지역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개선하려 한다며 대화를 늘리고 오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록클리어 사령관은 '2012 림팩(RIMPAC·환태평양) 훈련' 개막을 하루 앞두고 베이징을 찾아 관심을 샀음. 올해로 23회째를 맞는 림팩 훈련은 미국이 주도하며 인도, 러시아를 비롯해 22개국이 참여하나 중국은 빠졌음. 중국에서는 이를 미국의 대중 봉쇄 전략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임. 미국은 중국의 반대에도 U-2S 고공 정찰기를 동원해 중국 부근에서 정찰비행을 지속해오고 있음. 중국 전투기들은 미 정찰기를 쫓아내려고 종종 출격하기로 하며 그런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지기도 함. 중국의 정찰 비행 중단 요구에 미국은 국제공역에서의 정찰활동은 적법하다며 맞서고 있음.

● <미중, 남중국해 해법 '이견' 가시화할 듯>(6/28)

- 다음 달로 예정된 캄보디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법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이견'이 가시화할 전망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은 분쟁을 방지하고 조정할 '행동수칙(Code of conduct)'을 제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이런 미국을 못마땅해하고 있음.
- 우선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라고 선언하고서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 의지를 드러내는 미국의 태도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함. 중국은 기본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불개입, '구동존이'(求同存異·같은 것은 추구하고 이견은 남겨둔다), 평화적 해결이라는 3원칙으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풀자는 입장이기 때문임. 보다 구체적으로 지난 2002년 11월 중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소속 10개 회원국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약속한 남해각방선언을 바탕으로 당사국 간 양자교섭으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음.
- 여기에는 중국이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면서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관련 국가들을 각개 격파하는 식으로 남중국해를 '독식'하려는 의도가 짙게 묻어남. 실제 중국은 근래 남중국해의 난사(南沙)·시사(西沙)·중사(中沙) 군도를 묶어 관할하는 썌사(三沙)시를 출범시켜 행정력을 강화하고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의 황옌다오(黃巖島·스카보러섬)에서 필리핀과 장기간 해상대치를 감행해 주변국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음. 이 때문에 필리핀, 베트남을 필두로 주변국의 반발이 거세어 남중국해에서 이해당사국 간에 무력 충돌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당사국들 간 합의로 남해각방선언의 행동수칙을 만들어 '제도적인' 분쟁 조절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남해각방선언이 나오고서 10년이 지났고 그 기간에 여러 차례의 실무협의를 벌였지만, 중국의 반대로 행동수칙이 제정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중국에 대립각을 세우는 형국임.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이달 초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상그릴라 대화)에 참석해 남해각방선언 행동수칙 제정을 적극적으로 제안했으나 이견 탓에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미 행정부의 이태정책 실무사령탑인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



태 담당 차관보가 27일 워싱턴에서 캄보디아 ARF에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참석을 확인하면서 해당 포럼에서 남중국해 행동수칙이 합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점도 중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됨.

-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클린턴 국무장관은 2010년 베트남 하노이 ARF에서의 연설을 통해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국가이익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고 미국은 이를 계기로 중국을 공격한 바 있음.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을 방지하고 조율한 행동수칙에 동의하지 않으면 2년 전의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음. 당시 중국은 자국 관영 언론매체들을 총동원해 남중국해가 중국의 핵심이익이라며 미국의 강공에 맞서 '일전불사' 의지까지 비쳤으나 그에 미국 역시 강공으로 맞서면서 결국 중국이 일단 후퇴했음.
- 외교가는 또 지난 2004년 미국과 라오스 간 외교관계 체결 이후 미 외교장관으로서 처음으로 클린턴 장관이 라오스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주목하고 있음. 클린턴 장관은 캄보디아 프놈펜 ARF 직후 라오스를 방문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과 미얀마 간 관계개선에 이은 것으로 대(對) 중국 포위전략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나옴. 미국이 이미 남중국해와 인접한 호주 북부에 미군기지를 설치하기로 합의했고 싱가포르에 해군 전투함 배치를 합의했는가 하면 인도-일본-미국 3각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미국은 22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27일부터 시작된 '2012 림팩(RIMPAC·환태평양) 훈련'에 러시아, 인도를 포함하면서도 중국은 배제해 눈길을 끌었음.

● 美UTC, 中공격헬기 개발지원 소프트웨어 불법수출(6/29)

- 미국의 거대 기업 유나이티드테크놀로지(UTC)와 2개 자회사는 28일 (현지시간) 중국이 첫 공격용 헬리콥터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불법 수출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음. UTC와 자회사 프랫앤 휘트니, 해밀턴스탠더드는 무기수출통제법을 어긴 혐의로 7천50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미 법무부가 성명에서 밝혔음. 프랫앤 휘트니는 헬리콥터 엔진을 테스트하고 제어하는 군사 소프트웨어를 중국에 판매한 것을 인정했음. 이 기술은 중국이 새 전투 헬리콥터인 Z-10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됐음. 이들 회사의 중역들은 소프트웨어가 군사용 헬리콥터에 쓰일 것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다는 사실을 시인했음.
- 중국은 1990년대부터 민간 프로그램으로 위장해 공격용 헬리콥터를 개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 1989년부터 중국에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음. UTC가 법률을 준수하려고 노력할 경우 벌금은 2천만 달러까지 경감될 수 있음. 코네티컷주 검찰은 이번 사건이 무기수출통제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면 처벌받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설명했다.



마. 미·일 관계

● 日, 美와 F35기 대당 1천400억 원에 도입 합의(6/25)

- 일본이 미국과 차세대전투기인 F35기를 대당 102억 엔(약 1천460억 원)에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니혼게이지신문이 25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의하면 일본 방위성은 항공자위대의 차기 주력전투기인 최신예 스텔스전투기 F35기 도입과 관련, 2016년 말까지 들여올 4대분에 대해 대당 102억 엔 계약하기로 합의했음. 계약은 오는 29일 이뤄짐. 이는 애초 예상했던 가격 99억 엔에 비해 3억 엔 높은 것임. 이는 F35기의 생산이 지연되면서 인건비 등이 늘어났기 때문임. 일본 정부는 항공자위대의 F4기를 대체할 주력 전투기인 F35기를 모두 42대 도입할 방침임. 올해 F35기 관련 예산으로 600억 엔을 계상했음.

● 재미일본인 '美 위안부 결의안 폐지' 청원(6/27)

- 일부 재미 일본인들이 미국 의회가 지난 2007년 7월 채택한 '위안부 결의안'의 폐지를 위한 청원 운동을 백악관 웹사이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26일(현지시간) 나타났음. 이날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워싱턴DC에 거주하고 있는 '요코(Yoko)'라는 네티즌은 지난 21일 백악관의 인터넷 민원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 '미 하원 결의안 121호 폐지 청원'을 제출했음. 이 청원은 "지난 2007년 채택된 미 하원 결의안은 조작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이는 한국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행동을 비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지적했음. 히 "이는 한국이 자신들의 살인, 납치,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이름) 침략 등을 정당화하는 빌미가 된다"면서 왜곡된 주장도 펼쳤음.
- 청원은 이와 함께 태평양전쟁 당시 중군위안부를 강제 연행했다고 폭로한 바 있는 일본인 요시다 세이지(吉田 清治)에 언급, "그는 나중에 이를 '허구(fiction)'라고 고백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일 동맹이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안보이익에 중요하고 역내 안보와 번영에 기초가 된다면 한국인들이 이를 악화하도록 놔둬선 안 된다"며 "미 정부가 진실과 정의를 기반으로 행동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청원에는 이날 현재 2천800여명이 서명한 상태로, 백악관이 공식 답변의 최소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30일 이내 서명인 2만5천명 이상'을 충족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임.
- 이에 앞서 재미 일본인들은 최근 뉴저지주(州)에 건립된 '제2 중군위안부 기념비'의 철거를 요구하는 청원도 같은 웹사이트에 제출했으며, 재미 한국교포들이 이에 대항하는 서명 운동을 펼치는 등 과거사를 둘러싼 미국 내 한·일 교포사회의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임. 특히 일본인들은 이와 별도로 기림비 철거를 주장하는 인터넷 서명운동을 최근 시작하는 등 조직적으로 추모사업 방해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밖에도 백악관이 지난해 9월 개설한 청원 사이트에는 동해 표기와



위안부 기림비 등 한·일간 논란에 대한 청원만 5건이나 게재돼 있으며, 현재 서명자가 총 16만여 명에 달하는 등 양국 네티즌의 '외교전쟁'이 한창임. 미 하원은 지난 2007년 7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 일본 정부에 공식적이고 분명한 시인 및 사과, 역사적 책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음.

● "日, 美수직이착륙기 8월 오키나와 배치 묵인"(6/28)

- 미국이 잇따른 추락사고에도 신형 수직이착륙 수송기를 8월 중에 오키나와에 배치하기로 하자 일본이 이를 묵인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8일 보도했음. 보도에 따르면 마크 리퍼트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조만간 방일해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방위상에게 수직이착륙 수송기 V-22 오스프리의 추락 사고 원인을 설명하고, 이 수송기를 예정대로 8월에 오키나와에 배치할 방침을 전달할 예정임. 일본 정부는 27일 이를 묵인하기로 방침을 정했음.
- 이에 따라 모리모토 방위상이 이달 30일부터 오키나와현과 시험 배치 지역인 야마구치 현을 방문해 동의를 구할 계획임. 미국은 7월말에 야마구치 현 이와쿠니기지에 오스프리 12대를 시험 배치했다가 8월 중순에 오키나와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으로 옮길 계획임. 해당 지역 주민들은 오스프리가 4월(모로코)과 6월(미국 플로리다)에 잇따라 추락 사고를 일으킨 것을 계기로 "배치 계획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美, 日에 수직이착륙기 오키나와 배치 통보(6/29)

- 미국 정부가 잇따른 사고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해병대의 신형 수직이착륙수송기(MV22 오스프리)를 일본에 배치한다고 공식 통보했음. 29일 일본 언론에 의하면 미국 정부는 이날 오후 일본에 배치하기로 예정된 해병대 수직이착륙기 24대 가운데 12대를 다음 달 하순 야마구치(山口)현의 이와쿠니(岩國) 기지에 배치한다고 통보했음. 미 해병대는 이와쿠니 기지에서 수직이착륙기의 시험 비행을 거쳐 8월에 오키나와(沖繩)의 후텐마(普天間) 기지에 배치할 방침임. 수직이착륙기는 후텐마 기지의 중형 수송기인 CH46이 낡아 기종 교체 차원에서 배치됨. 야마구치현과 오키나와현은 미국의 수직이착륙기 배치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수용할 방침임.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방위상은 30일에는 오키나와, 다음 달 1일에는 야마구치를 방문해 수직이착륙기의 배치에 대한 이해를 구할 예정임.
- 미 해병대의 신형 수직이착륙기는 지난 4월 모로코에서 추락사고가 났고, 이달 13일에는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도 추락해 야마구치와 오키나와 현이 불안해하고 있음. 미일 안전보장조약에는 수직이착륙기를 포함한 통상적인 무기의 교체는 미국 측의 판단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음. 미국 측은 일본 정부에 모로코와 플로리다에서의 수직이착륙기 추락 사고는 기체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바. 미·러 관계

● 러서 美의 '마그니츠키법안' 보복 여론 높아져(6/27)

- 러시아에서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인권 확대에 개입한 러시아 당국자들에 대한 제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위 '마그니츠키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음. '마그니츠키 법안'은 러시아 관리들의 대규모 횡령사건을 고발한 뒤 기소돼 2009년 현지 구치소에서 사망한 러시아인 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 사건 관련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미 상원 외교위는 지난 26일(현지 시간)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음. 이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회의(상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 미하일 마르젤로프는 27일 미 상원 외교위를 통과한 마그니츠키 법안이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승인되지 않거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
- 마르젤로프는 위원장은 "미국은 상하원 전체 회의에서 마그니츠키 법안을 지지하지 않음으로써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며 "설령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리셋(reset, 미-러 관계 재설정) 버튼이 눌러붙지 않도록 할 가능성도 있다"고 기대감을 표시했음. 마르젤로프는 그러면서 "마그니츠키 법안을 채택하는 것은 미국이 러시아에 원한을 품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反)러 행위로, 미국은 러시아의 대외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이 명단(출입국 금지자 명단)을 보여줄 것"이라고 꼬집었음. 그는 법안이 채택되면 러시아도 대응 조치로 자국 입국을 금지하는 비우호적 미국인 명단을 작성할 것이며 여기엔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인들과 금융인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경고했음. 그는 그렇게 되면 러시아의 (정책) 결정권자들의 미국 파트너들에 대한 관계가 나쁜 쪽으로 변할 것이고 미국의 정치적 선언(마그니츠키 법)은 양국 경제 관계 발전의 또 다른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음.
- 한편 러시아 국가두마(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 파벨 크리슈넨니코프도 이날 미 상원 외교위의 마그니츠키 법안 통과에 맞서 러시아가 상응하는 문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리슈넨니코프는 "우리를 구석으로 몰았으니 우리도 어떻게든 대응해야 한다"며 "법안이나 법령 채택 등의 형태로 어떤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영국 투자펀드 허미티지캐피탈에서 일한 러시아인 변호사 마그니츠키는 2008년부터 자국 검찰과 경찰, 판사, 세관원 등 고위공무원들이 연루된 대규모 비리사건을 파헤치다 탈세 방조 혐의로 기소돼 조사를 받던 중 2009년 11월 구치소에서 숨졌음. 구치소 측은 애초 마그니츠키가 심장 마비로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유족과 인권단체의 끈질긴 반발로 구성된 러시아 특별조사위원회는 마그니츠키가 수감 중이던 교도소에서 고무 곤봉으로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고 지난해 공식 발표했다.



● 러' 외무, 美 對러 인권법안 채택 자제 촉구(6/30)

- 러시아가 미국이 채택하려는, 러시아 내 인권 탄압 관계자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담은 소위 '마그니츠키 법안'에 대해 거듭 경고하고 나섰다. 러시아 외무부가 30일 내놓은 언론보도문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하루 전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미국이 '마그니츠키 법안'을 채택할 경우 양국 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음.
- '마그니츠키 법안'은 러시아 관리들의 대규모 횡령사건을 고발한 뒤 기소돼 2009년 현지 구치소에서 사망한 러시아인 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 사건 관련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임. 미 상원 외교위는 지난 26일(현지시간)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음. 법안은 이에 앞서 하원도 통과했음.
- 영국 투자펀드 허미티지캐피탈에서 일한 러시아인 변호사 마그니츠키는 2008년부터 자국 검찰과 경찰, 판사, 세관원 등 고위공무원들이 연루된 대규모 비리사건을 파헤치다 탈세 방조 혐의로 기소돼 조사를 받던 중 2009년 11월 구치소에서 숨졌음. 구치소 측은 애초 마그니츠키가 심장 마비로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유족과 인권단체의 끈질긴 반발로 구성된 러시아 특별조사위원회는 마그니츠키가 수감 중이던 구치소에서 고무 곤봉으로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고 지난해 공식 발표했음. 러시아는 그동안 미국이 마그니츠키 법안을 채택할 경우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해왔음. 러시아 측은 마그니츠키 법안이 상하원 전체회의에서 부결되거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

사. 중·일 관계

● 〈中日 영토 갈등, 판다에 불똥〉(6/30)

- 자극적인 발언을 일삼는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도쿄도 지사 탓에 중일간 영토 갈등의 불씨가 중국에서 일본에 보낸 판다에게까지 튀었음. 29일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측이 어떤 이름을 붙이든 판다도, 닌슈(釣魚島, 일본명 센카쿠(尖閣))열도도 중국 소유라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고 밝혔음. 홍레이 대변인이 이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은 이시하라 지사가 최근 도쿄 우에노(上野)동물원에 있는 판다 쌍쌍이 임신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자 "새끼 판다가 태어나면 '센센'과 '가쿠카쿠'라고 이름 짓는 게 좋겠다"라고 농담처럼 말한 것과 관련이 있음.
- 센카쿠라는 이름에서 '센(尖)'과 '가쿠(閣)' 한자씩을 따서 판다 이름을 지을 수 있다고 발언한 것임. 이시하라 지사는 그동안 일본 민간인 소유로 돼있는 센카쿠열도를 사들이겠다며 모금을 했을 정도로 영토 갈등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음. 이시하라의 도발적인 발언에 중국 측이 불쾌



감을 보였지만, 사실 우에노동물원에 있는 판다라고 해서 일본 측이 마음대로 이름을 붙일 수는 없음.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 판다는 중국 소유이고, 새끼 판다가 태어날 경우 이름을 지으려면 중국 측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임. 편 싱싱이 실제로 임신했는지도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싱싱이 식욕이 감퇴하고 사람 눈을 피하는 등 임신 징후를 보이고는 있지만 상상임신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 도쿄지사, 美 언론에 '센카쿠=일본 땅' 광고 계획(7/1)

-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일본 도쿄도 지사가 미국 유력지에 중일 영토갈등 대상인 센카쿠(尖閣, 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영토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의견광고를 낼 계획이라고 요미우리신문과 도쿄신문이 1일 보도했음.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이시하라 지사는 전일 일본 취재진에 "미국이 이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태평양 전체를 잃을 수도 있다고 조언하겠다"며 조만간 뉴욕타임스 등 미국 유력지에 광고를 내겠다고 말했음. 그는 또 차기 총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센카쿠(문제)에 손을 대고 있음. 일단 말을 꺼낸 만큼 이 일을 완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답한 뒤 일본 내 민간인 소유로 돼 있는 센카쿠를 사들이는 문제를 우선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아. 중·러 관계

● 러, 총리 쿠릴방문 비판한 일본에 역공(6/26)

- 러시아 외무부가 25일(현지시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의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방문 계획에 대한 일본 측의 비판을 반박하고 나섰다. 외무부는 이날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언론보도문에서 일본 측이 메드베데프 총리의 쿠릴열도 방문 계획에 대해 언급한 사실을 거론하며 "쿠릴열도는 러시아의 분리될 수 없는 영토이며 외국이 러시아 지도부의 국가 영토 방문 계획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극동 사할린 소재 인터넷뉴스 통신 사흐콤(Sakh.com)은 앞서 24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다음 달 초 쿠릴열도 가운데 하나인 이투롭(일본명 에토로후)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일본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고위 관리의 방문 계획은 일본의 입장과 배치되며 불쾌한 일이라고 논평했음.
- 메드베데프 총리는 대통령이던 지난 2010년 쿠릴열도의 쿠나시르(일본명 구나시리)를 방문한 바 있음. 당시 일본은 러시아의 최고지도자가 처음으로 쿠릴열도를 방문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으며 이후 양국 외교 관계가 급속히 냉각됐음. 메드베데프 총리의 쿠릴 방문 계획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지난 18일 멕시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린 양자회담에서 양국의 영토 분쟁 대상인 쿠릴열도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계속해 나



가기로 합의한 뒤 나온 것이어서 일본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북서쪽의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 등 4개 섬을 일컫는 쿠릴열도에 대해 일본은 역사적으로 '북방영토'라고 주장하며 줄기차게 반환을 요구하고 있음. 하지만 러시아는 쿠릴열도가 2차대전 이후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됐다고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러, 순시선 쿠릴열도 인근서 일본 선박 나포(종합)(6/26)

- 러시아 국경수비대가 일본과 영토 분쟁을 빚고 있는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인근에서 일본 선박을 나포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과 일본 NHK 방송이 26일 일본 외무성을 인용해 보도했음.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국경수비대 소속 순시선이 이날 오전 1시께(한국시각) 쿠릴열도 가운데 하나인 쿠나시르(일본명 구나시리) 서북쪽 해상에서 정선 명령에 응하지 않은 채 일본쪽으로 빠른 속도로 도주하던 일본 선박을 붙잡았음.
- NHK는 이 선박에 일본인 2명과 러시아인 2명이 타고 있었고, 말린 해삼과 금방 잡은 해삼이 실려 있었다고 전했다. 일본인 2명은 쿠나시르 섬의 유즈노쿠릴스크로 연행됐고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측이 이 같은 사실을 일본 측에 통보했음. 배의 선적 등은 확인되지 않았음. 러시아 국경수비대는 지난 2007년에도 쿠나시르 인근에서 4척의 일본 예인망 어선들을 나포한 바 있음. 쿠릴열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은 러시아가 이 해역에서 조업하는 일본 어선들을 나포하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앞서 러시아 외무부는 하루 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의 쿠릴열도 방문 계획에 대한 일본 측의 비판을 반박하고 나섰다. 외무부는 이날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언론보도문에서 일본 측이 메드베데프 총리의 쿠릴열도 방문 계획에 대해 언급한 사실을 거론하며 "쿠릴열도는 러시아의 분리될 수 없는 영토이며 외국이 러시아 지도부의 국가 영토 방문 계획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극동 사할린 소재 인터넷뉴스 통신 사흐콤(Sakh.com)은 앞서 24일 메드베데프 총리가 다음 달 초 쿠릴열도 중 하나인 이투루프(일본명 에토로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이와 관련해 일본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고위 관리의 방문 계획은 일본의 입장과 배치되며 불쾌한 일이라고 논평했음.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북서쪽의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 등 4개 섬을 일컫는 쿠릴열도에 대해 일본은 역사적으로 '북방영토'라고 주장하며 줄기차게 반환을 요구하고 있음. 하지만 러시아는 쿠릴열도가 2차대전 이후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됐다고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자. 기. 타

● "美, 한반도 긴장 억제 위해 서해서 군사력 과시"(6/25)

- 미국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에 새로운 긴장이 조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황해에서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다고 프랑스의 르 피가로 신문이 25일 보도했음. 르 피가로는 지난 23일 시작된 한미 연합 해상기동훈련에 미 해군은 핵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선도하는 함대를 파견했다며 이번 합동 훈련의 목적은 남·북한이 치열하게 충돌해온 이 해역에서 북한의 새로운 군사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 4월 북한이 한국에 대해 곧 '특별행동'을 취하겠다고 위협한 이후 북한의 군사 위협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에 맞서 한국도 북한에 대한 경고를 멈추지 않고 있음.
- 서방의 한 군사 전문가는 한국 보수 진영이 야당 진영의 대북 대화 주장을 비판하는 시점에 한미 군사훈련이 강화된 것은 무엇보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한국민들을 안심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음. 하지만 한국과 미국이 공식적으로 양국의 동맹이 확고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미국이 현재 300km로 제한된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하는 문제에 반대, 양국 간에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음. 르 피가로는 한국은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km로 늘려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미국은 중국과 일본을 고려한 지역 안정을 우선시하고 있다면서 미국 핵 항공모함의 합동훈련 참가가 이러한 상황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음.

● 美·日·EU, WTO에 희토류 무기화 제소(6/27)

-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에 대해 27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제소했음. 미국과 일본, EU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소위원회(패널) 설치를 WTO에 요구했다고 EU와 일본 정부가 이날 밝혔음. EU의 카렐 데 휘흐트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을 통해, 지속된 협의에도 "중국이 수출 규제를 풀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를 제소로밖에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유감스럽다"고 밝혔음. 그는 "희토류 및 관련 상품들에 대한 중국의 규제는 WTO의 규칙을 위반한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다른 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해 세계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음.
- 일단 중국은 소위원회 설치 요구를 한번 거부할 수 있지만, 다음달 23일 열리는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요구가 채택되면 설치가 확정됨. 한 일본 정부 관리는 소위원회 설치 이후 9개월에서 1년 이내에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내다봤음. 미국과 일본, EU는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희토류의 수출을 규제해 국제적 무역 규범을 다루는 WTO의 무역 규칙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음. 앞서 미국과 일본, EU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계속 협의했지만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음

● **北, 한일정보보호협정에 "사대매국행위" 비난(6/28)**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8일 우리 정부가 이틀 전 국무회의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을 비공개로 의결한 것에 대해 "매국 행위"라며 비난했음.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논평에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으로 말하면 남조선괴뢰들이 일본과 그 무슨 '도발설'에 대해 쌍 피리를 붙여대며 군사분야에서 포괄적인 정보를 교류한다는 구실로 추진해온 매국협정이며 반공화국 대결공조협정"이라고 주장했음.
- 이 매체는 "남조선 괴뢰들에게는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사급히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미국의 압력"이라며 "미국에 잘만 보이면 민족의 운명과 민심 같은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극악한 사대매국의식이 이런 희세의 정치날치기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난했음. 우리민족끼리는 "외세에 명줄을 건 역적배들이 남조선 정권에 틀고앉아있는 이상 앞으로 이보다 더한 사대매국행위가 더욱 노골화될 것은 불보듯 명백한 일"이라며 "사대매국무리들을 사급히 매장해버려야 한다"고 했음.

● **中, 韓日군사협정 추진에 부정적 반응(6/29)**

- 중국이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 이하 정보보호협정) 추진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음. 중국 외교부 홍레이(洪磊) 대변인은 29일 "관련국들은 신중한 행동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유리한 일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음. 홍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가 무엇이나는 연합뉴스 기자의 물음에 "현재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여전히 복잡, 민감하다"며 이같이 답했음. 홍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관련 보도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며 "중국은 대화와 협상만이 조선반도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해왔다"며 "대립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이날 홍 대변인의 발언은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중국 정부의 첫 공식 반응임. 홍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는 같은 질문에 "우리는 당신이 언급한 문건에 대해 이해를 더 해야 한다"며 평가를 유보했음. 정보보호협정 체결의 표면적 명분이 대북 정보 공유에 있다고는 하지만 중국은 장기적으로 이를 계기로 한미일 3각 동맹이 강화돼 자국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특히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한다는 명분으로 한국이 미국 주도의 MD(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가세하는 것이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극도로 경계심을 가져왔음.

● **"美, '정보협정' 불발로 한일관계 특수성 실감"(6/30)**

- 미국 정부는 29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막판에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서명을 연기한 것과 관련,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



았음. 기본적으로 한일 양국 간의 일이기 때문임. 게다가 한국내 일각에서 한일정보협정 체결의 배경으로 '미국의 재촉'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제기된 상황임.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이번 일과 관련해 미국 측과 어떤 접촉도 없었으며, 협정체결이 연기된 과정을 미국 측에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음.

- 미국 정부는 한일정보협정 체결 연기가 결정되는 한국 측의 움직임 등에 대해서는 주한 미국대사관의 보고를 통해 이미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음. 미국 정부는 한일 양국이 협정체결을 위한 마지막 수순에 접어들자 "구체적인 논평은 양국 정부의 몫"이라고 신중한 태도 속에서도 내심 반기는 눈치였음. 한 국무부 당국자는 지난 27일 연합뉴스에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관계를 환영한다(welcome)"고 말하기도 했음.
- 또 다른 외교소식통은 "한일정보협정 체결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미묘한 정서가 개입되는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새삼 실감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소식통은 또 "한일정보협정 체결을 둘러싼 한국 정부의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의견이 워싱턴 외교가에서도 팽배하다"면서 국가 간의 약속(협정 체결)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외교적 결례라고 지적했다.

● "핵 강국들, ASEAN 내 핵무기 사용금지 약속"(6/30)

- 핵무기를 보유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이 동남아국가연합(ASEAN) 국가들에 대한 핵무기 사용 금지를 약속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ASEAN 소식통들을 인용해 30일 보도했음. 소식통들은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다음 달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ASEAN 외교장관회의 및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ASEAN 회원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약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음. 이들은 이 협약에 ASEAN 10개 회원국이 동남아시아를 비핵지역으로 유지하기 위해 1997년 체결한 '동남아 비핵지대화 조약(SEANWFZ)'에 대한 이행 약속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음.
- 협약이 각 서명국의 비준을 받으면 동남아시아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실질적인 비핵지대가 될 것으로 보임. ASEAN은 비핵지대화 조약 발효 후 핵보유국들과 조약 실행을 위한 협상에 나섰으나 각국의 이해가 달라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음. ASEAN 소식통들은 5개 핵무기 보유국들과의 협상이 지난해 10여 년 만에 재개됐으며 협상에서 ASEAN 국가들이 핵무장 선박의 자국 항구 입항과 영해 통과 허용 등 비핵지대의 정의를 일부 완화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ASEAN 외교장관회의 및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은 내달 9~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며 김성환 외교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대표도 참석할 예정임.